

제16회 韓·日 국토분야 협력회의 출장보고서

일본 국토교통성 주최로 9.8(화)~11(금) 동경 및 북해도에서 개최된 「제16회 韓日 국토계획분야 협력회의」 참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 9

국 토 연 구 원

I. 협력회의 개요

1. 추진경위

- 韓日간 국토분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위해 '93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례 협력회의 교환 개최
 - 전체회의 및 3개 분과회의(국토, 토지, 수자원)로 진행
- '08년까지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제16회 협력회의는 일본(국토교통성) 주최로 동경에서 개최

2.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9. 9. 8 ~ 9. 11(4일간)
 - 9. 8(화) : 출국 및 도쿄 록본기힐즈, 도쿄역 시찰
 - 9. 9(수)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 9. 10(목) : 홋카이도(北海道)개발국 간담회 및 오타루(小樽)항 시찰
 - 9. 11(금) : 삿포로시(札幌市) 오도리(大通り) 공원 시찰 및 입국
- 장 소 : 동경 및 북해도(현장시찰)

3. 대 표 단(명단별첨)

- 한국 : 국토정책국장 등 14명
 - ※ 국토(5), 토지(2), 수자원(2), 토공(2) · 수공(1)·국토연(1)·건기연(1)
- 일본 : 竹歳 誠(Taketoshi Makoto) 국토교통심의관 등 16명

4. 주요활동 내용

① 협력회의 발표·토의

<전 체 회 의>

- 한 국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해양 추진전략
- 일 본 : 광역지방계획의 결정 및 광역자립 추진방안

<국토분과>

- 한 국 : 해안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 일 본 : 인구감소·고령화 사회의 지역적 과제

<토지분과>

- 한 국 : 토지은행제도의 도입 및 추진방안
- 일 본 : 토지정책의 중장기 비전

<수자원분과>

- 한 국 : 기후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수자원 정책방향
- 일 본 : 종합 수자원 관리방안

② 기관방문 및 국토 현장 시찰

- 도쿄 록본기힐즈 재개발 현장시찰
 - 소재지 : 東京都 港區 六本木 6丁目
- 도쿄역 구내 상업시설 시찰
 - 소재지 : 東京都 千代田區 丸の内 1丁目
- 홋카이도개발국 오타루개발건설부 방문
 - 오타루 운하, 오타루항 시찰
 - 소재지 : 北海道 小樽市 潮見台 1丁目
- 홋카이도개발국 방문
 - 업무현황 청취 및 의견 교환

II. 협력회의 결과

중 합

- 일본의 국토정책은 고령화, 인구감소, 글로벌 경쟁격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종합개발 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토형성계획법을 시행하고('05.12),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전국 계획)수립('08.7 각의 결정)
 - 국가 주도에서 국가와 지방이 협동하여 지금까지의 전국 종합계획을 대신할 새로운 광역지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방계획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성 대신이 결정('09.8)
 - 광역지방계획은 '광역권별로 특색 있는 전략의 수립', '권역 간 교류·연계를 통한 상승효과 발휘', '권역 간 상호 보완을 통한 공생', '문화·전통과 개성 있는 경관 등 아름다운 국토의 재구축' 등을 기조로 작성됨
 - 이를 위해 권역 외부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등과의 교류·연계', '태평양뿐만 아니라 일본해와 동중국해의 활용', 내부에 있어서는 '성장엔진인 도시·산업의 강화', '각 지역의 연계 및 상호 보완', '지역의 모든 힘을 결집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의 형성'을 통해 자립적인 발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발전전략을 제시함
- 토지정책은 '91년 종합토지대책(거품대책), '97년 신종합 토지정책(자산 디플레이션 대책), '05년 토지정책의 재구축 (자산 디플레이션 대책으로부터의 탈각)등

- 일본 토지정책은 일본 사회변화를 수용해 변화되어 왔음
 - 최근에는 이용가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인구감소·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적 글로벌화, 환경·안전·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절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기업·국민들과의 협력하여 대책을 추진
- 일본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초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수자원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
- 이러한 결과가 종합 수자원 관리라는 형태로 나타남
 - 종합 수자원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음
 - 물 관리체계가 일본과 비슷한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종합 수자원 관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이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북해도는 경제·사회의 글로벌화, 지구 환경문제의 심각화 및 본격적인 인구감소사회의 도래 등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홋카이도 종합계획('08'17)**을 수립 시행('08.7)
- 열려 있고 경쟁력 있는 홋카이도 실현,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홋카이도 실현, 다양하고 개성적인 지역으로 구성된 홋카이도 실현 등 3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 자립적 안정 경제 실현, 자연과 공생하는 지역사회 형성, 북국의 내고장·내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와 모빌리티 향상, 안전하고 안심한 국토 만들기 등 5대 주요 시책을 추진

1. 전체회의

양국 발표의제

- 한 국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해양 추진전략
- 일 본 : 광역지방계획의 결정 및 광역자립 추진방안

《한국측 발표 : 국토정책과 표용철 서기관》

□ 발표요지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배경, 녹색성장의 개념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저탄소 성장을 위한 국토해양 비전 및 전략 등을 소개
- 저탄소 국토·도시 공간 조성, 탄소 저감형 건물 보급 확산,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녹색 해양산업 육성 등 분야별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

□ 일본측 반응

- CO₂ 저감목표, 국가 목표 및 부문별 계획 수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 '08. 9월부터 관계부처·연구기관 합동으로 연구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네덜란드에서 국가별 감축목표 발표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음

- 일본은 이산화탄소 삭감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한국은 어떤가?
 - 이산화탄소 삭감목표 설정을 위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한국의 경우 경험과 시간 부족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이 아닌, 가능한 수단을 먼저 고민하고 이에 걸맞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목표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임
- 정책이 광범위하여 국토계획만으로는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가?
 -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3개 위원회를 ‘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별 녹색성장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
- 저탄소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인센티브 방안은?
 - 각종 세제 지원, 버스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현재 마련중에 있음
- 4대강 살리기 관련 기존 보에 대비한 친 환경 보의 개념은?
 - 친 환경 보는 홍수 대비 및 지역 친수 공간 조성 등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중소규모 댐의 건설 계획은?
 -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댐은 건설 불가, 농업용 댐 중심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그 주목적은 공업용수·농업용수의 공급임

- 4대상 살리기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임
 - 턴키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시공을 신속히 함으로써 매년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이 있음

《일본측 발표 : 광역지방계획과장 福島 章》

□ 발표요지

- 광역지방계획의 기조와 수립 절차, 권역별 주요 내용, 광역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발표
- 광역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크게 광역 단위의 관점과 마을 단위 관점에서 접근
 - 광역 단위의 전략으로는 산업집적 전략과 도시간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 마을단위의 전략으로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를 육성한다는 전략을 제시

□ 한국측 질의사항

- 지자체간 의견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가?
 -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가령, 큐슈권은 큐슈지방정비국)이 주도하여 조정

-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가?
 - 권역별로 자치단체장, 경제단체의 장,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재활용(현재까지는 계획수립 기능 담당)하여 협의회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
 - 광역지방계획의 집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계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중앙정부는 광역지방계획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
- 광역지방계획의 구속성은?
 -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10년 이내에 추진될 사업으로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구속성은 없음. 즉, 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열쇠임
- 지방권의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방 인구의 감소·정체는 전후 고도성장기에 3개 대도시권으로 산업이 집중함에 따라 발생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대도시권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등의 국토정책을 추진하였음. 한편, 최근에는 은퇴한 도시지역의 고령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I·J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징조로 판단
- 광역권별로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잉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은 지역의 생각과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임. 즉, 산업배치는 민간과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구도로 진행되고 있음
- 기업 등 민간부문의 의견은 수렴하는가?
 - 권역별로 구성된 광역지방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제단체의 장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음

※ 타케토시 단장 보충 설명

- 일본은 1980년대 테크노폴리스 정책을 도입하여 지방에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도·배치하고자 하였으나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는 데는 실패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입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하지만, 최근 해외로 진출하였던 기업, 특히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던 기업들은 점점 까다로워지는 규제 등으로 되돌아 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최근 기업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행·재정적 지원보다 고속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샤프라는 대기업이 신규공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국내·외의 지방정부간에는 치열한 유치경쟁이 전개되었지만, 결국 샤프는 거액의 보조금(현 90억엔, 시 45억엔(시의 예산은 135억엔에 불과) 합계 135억엔)을 지원하겠다는 미에현(三重縣)을 선정하였음
-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일본 정부는 각종 규제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본의 엄격한 규제를 싫어하는 외국 기업들은 규제가 덜한 국가로 입지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구온난화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려면 국가 간 공조·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중앙정부는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역권정책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음
- 다만, 광역권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구축되었을 경우 국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국토계획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산업배치 전략에서 정부의 역할을 ‘주도’에서 ‘지원’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음
 - 산업입지측면에서는 공급자인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 멤버로 포함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아울러, 일본 정부는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
 -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되는 우리나라도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환경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향후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공조체계의 구축방안을 강구할 필요

2. 국토분과회의

양국 발표의제

- 한 국 : 해안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 일 본 : 인구감소·고령화 사회의 지역적 과제

《한국측 발표 : 해안권기획과장 서명교》

□ 발표요지

- 초광역개발권의 추진배경, 비전 및 추진전략, 권역별 개발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 일본측 반응

- (총평) 해안 초광역개발은 초국경적이고 광역을 벗어나 서로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동서남해안을 새로운 신성장축으로 육성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 프로젝트라고 생각됨
-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과의 관계는?
 - 광역경제권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유사한 행정권역을 묶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성장거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에 반해 초광역개발권은 광역경제권을 벗어나 서로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산업·관광·인프라 등을 벨트화 하여 선택과 집중화로 글로벌 국토의 신성장 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금까지의 국토개발현황은 내륙권 중심(경부축)이었다고 생각됨. 초광역개발은 내륙축과 동서남해안을 포함하여 개발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동서남해안개발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처음에는 남해안에서 시작하여 동·서해안으로 확대되어 동서남해안으로 되었음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현재까지의 지역정책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했음
-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1차원적인 점단위의 기초생활권, 2차원적인 면단위의 광역경제권, 3차원적인 선단위의 초광역개발권임.
- 초광역개발은 광역경제권을 벗어나 서로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산업·관광·인프라 등을 벨트화 하여 선택과 집중화로 글로벌 국토의 신성장 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국토개발에 있어 해안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 동서남해안 중심의 해안개발에 대해 내륙권에서도 내륙권을 해안권과 같이 개발 해달라는 요구가 있음. 내륙권도 해안권처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필요한 실정임
- 초광역개발의 추진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 해안권 시·도지사가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입안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각 부처의 협의를 한 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정부에서 승인하게 됨. 올해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임

《일본측 발표 : 종합계획과장 川上征雄 》

□ 발표요지

- 역사적으로 일본의 인구는 두 차례의 인구증가를 거쳐 2004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로 진입
 - * '04년 1억 2,784만명(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55년 8,993만명 예상
 - * 고령화율의 추이 : '05년 20.2%, '15년 26.9%, '30년 31.8%
- 향후, 수도권과 오키나와현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감소할 추세에 있음. 특히, 중산간지역의 자연취락 지역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
- 이들 과소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과소채라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각종 생활·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들 지방채의 70%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상환
- 일본 정부는 이들 과소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3,000~5,000명 단위를 대상으로 초·중학교, 우체국, 진료소 등 각종 공공시설을 정비할 계획
- 이처럼 중산간지역의 자연취락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배경 중 하나는 '사람이 살고 있어야' 국토를 관리할 수 있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

□ 한국측 질의사항

-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지역적 과제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실정임.

- * '18년 49,340천명(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30년 48,634천명 예상
- * '00년 고령화율이 10.3%로써 고령화 사회 진입('00년 7.2%, '08년 10.3%), 도시로의 인구유입 증가(88.3% '07년 90.5%)

○ 과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인책은 무엇인가?

-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하고 있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이주정책도 중요하지만, 방문객·NPO 등 교류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 즉. '농촌 활성화를 통해 교류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정책임.
- 아울러, 과소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생활기반시설은 전국 평균적인 수준으로 정비되었음
- 하지만, 지원근거 법률은 한시법(10년마다 연장해 오고 있으며, 내년 시한이 도래)이기 때문에 정권교체로 재연장은 불투명한 상태

○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과소지역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

- 행정구역 통합 전 전국의 약 3,300개의 기초지자체는 통합 후 1,800개로 감소하였고, 과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구역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과소지역이 밀림에 따라 지자체 행정에서 홀대를 받고 있음

○ 3,000~5,000명 도출 근거와 공간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실제 계획권역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거리와 규모를 판단하였을 경우 약 50ha 정도로 판단

- 아울러, 현재 공공시설별로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배경도 깔려 있음
-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인재를 정책적으로 양성할 계획에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도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구감소가 국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큼
- 가령, 국토관리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람들을 중산간지역 처럼 생활하기 불편한 곳에 정주시키려면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기존의 ‘따로 따로’ 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모듬’ 공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3. 토지분과

양국 발표의제

- 한 국 : 토지은행제도의 도입 및 추진방안
- 일 본 : 토지정책의 중장기 비전

《한국측 발표 : 토지정책과 김정희 사무관》

□ 발표요지

- 토지은행 의의 및 도입배경
 -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 가능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공공 목적에 적가로 적기에 공급
 -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시장의 안정 도모
- 토지은행의 주요 내용
 - 토지비축위원회, 토지비축계획, 토지의 비축·관리·공급 절차 등
-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저렴한 토지공급으로 인한 산업용지 가격인하
 - '09년 21개 사업 2조규모의 토지비축 추진

□ 일본측 반응

- 토지은행제도 운영에 많은 관심 표명
- 일본은 지방공사에서 토지은행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국이 중앙정부차원에서 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한 이유는?
 - 한국은 SOC, 산단 등 아직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소요가 많고
 - 토지공사는 토지취득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토공에 설치
- 수급조절용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공공토지비축법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토지비축에 있어서 토지수요 전망 및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토지수요 및 공급의 전망 및 예측은 적정 토지비축규모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
- 토지공사의 주된 업무는 ?
 - 신도시건설,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정부정책사업과 토지 취득, 개발, 관리, 공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일본측 발표 : 토지정책과장 大野 雄一(OHNA, YUICHI)》

□ 발표 요지

- 일본 토지정책은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의 이용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절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기업 · 국민들과의 협력하여 대책을 추진
- 신도시재생, 부동산정보의 종합정비, 환경가치를 부동산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특히 일본국민들은 빈집, 공터 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토지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 빈집관리 등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측 질의사항

- '07년부터 일본 신규주택착공건수가 줄어들고 전국맨션 공급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건설 및 공급 축소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는 없는지 ? 정부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일본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증권화 실적이 급감하고 상장종목이 폐지되고 있는데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 작년 1개의 상장종목이 폐지되었는데 현재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빈집 및 공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 조례이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법률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한국은 중소도시에 개발이 진행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개발이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가?
 - 일본은 개발과정에서 부도처리되고 채무관계가 얽혀 개발이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부차원의 정책이 없음
- 공터·빈집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
 - 사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젊은 층의 도심 이주, 저출산으로 인한 신규 전입인구 부족이 주 이유임
 - * 자식들이 분가한 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부모집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아주 많음
- 공터·빈집의 대책으로 인접주택 소유자가 공터를 취득하여 부지확대를 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적·금융적 지원책은?
 - 별도의 지원대책은 없으며 지자체나 지역주민회 등을 통한 권고, 요청 등을 하고 있음

- 일본의 토지에 대한 중기비전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 토지정책의 중기비전은 각 권역마다 수립되는 광역지방 계획에 부합하여 수립된 것임

□ 일본 토지정책 중장기 비전의 시사점

- 일본은 직접적인 규제나 부양책 보다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
- 신도시재생, 빈집·공터 등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 문제, 부동산의 환경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방법 등은 우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

〈참고 : 일본 토지정책의 중장기 비전 요약〉

일본 토지정책의 중장기 비전

-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부동산 운영비전 -

□ 그간 일본 토지정책의 변화

- '91년 종합토지대책(거품대책), '97년 신종합토지정책(자산 디플레이션 대책), '05년 토지정책의 재구축(자산 디플레이션 대책으로부터의 탈각)등
- 일본 토지정책은 일본 사회변화를 수용해 변화되어 왔음

□ 최근의 환경변화

- 이용가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형성
- 토지는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활용하는 자산이 되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
- 사회경제적으로 인구감소·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적 글로벌화, 환경·안전·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 토지정책의 중장기 비전

-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의 이용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절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기업·국민들과의 협력하여 대책을 추진

□ 토지정책의 중장기 비전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① 신도시 재생

- (현황) 일본은 전후 60년대 신도시를 집중 개발,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이 건설되어 근로육아세대가 일제히 입주
 - * 센리신도시('62~'70) 25,000호 이상, 아카시마이코('65~'74) 7,000호 이상
- 거주민의 노령화,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상점의 쇠퇴, 초등·중학교의 유희화 발생
 - * 센리신도시 학급수('75년 160개 ⇒ '00년 40개)
- (문제점) 단지재생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주체가 없어 토지이용을 상호조정하는 시스템이 불충분
 - * 다양한 주체가 쇼핑지원, 간호지원, 주거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별과제 대응에 급급하여 연계 불충분
- (추진방향) 재생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목표·비전을 수립하고
 -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관되게 재생사업을 추진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인재 육성 및 자금 확보가 중요

② 부동산정보의 종합정비

- (현황) 일본부동산에 대해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지가정보, 민간이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 토지의 안전성(토양오염, 재해이력), 부동산 거래가격, 환경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부족*

* 부동산 정보 정비 부족정도 조사('08년 토지투자동향, 국토교통성)

- (정책방향) 부동산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 및 해외투자자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

* 토지거래가격 정보 제공('07년 10월~), 국제토지정책포럼 개최, 주요 도시 지가동향 영어판 공표 등

- 정보의 유기적인 연계 분석으로 통해 정보 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정보기반 구축

③ 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부동산으로 수용

- (현황)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자원절약 같은 환경적 측면은 중요시 되지 않고 있음*

* 부동산투자가 170사 대상, 부동산투자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사항 설문조사 결과 내진대책 등이 중요('뉴스 릴리스' '09.6)

- (정책방향) 환경 부동산의 경제가치가 시장에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유도가 필요

- 부동산의 환경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분석하는 기법 확립
- 환경부동산의 인센티브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④ 공터·빈집 등에 대한 대응

- (현황)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공터·빈집 등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증가하는 등 외부 불경제를 초래하는 토지이용이 발생·증가
 - 전국의 70% 시구정촌에서 공터·빈집문제 발생
 - * 토지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빈집·공터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크게 실감하고 있음(‘09년 1월, 국토교통성)
- (정책방향) 현재 공터, 빈집의 유지관리 의무화를 조례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 외부불경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공터·빈집등의 활용방안 포함) 모색 필요
 - 소유자부재·불명 부동산의 관리방법 검토

□ 일본 토지정책 중장기 비전의 시사점

- 일본은 직접적인 규제나 부양책 보다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
- 신도시재생, 빈집·공터 등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 문제, 부동산의 환경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방법 등은 우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

4. 수자원분과회의

양국 발표의제

- 한 국 : 기후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수자원 정책방향
- 일 본 : 종합 수자원 관리방안

《한국측 발표 : 수자원정책과 신태상 사무관》

□ 발표요지

- 한국의 수자원 일반현황 소개(강수 및 유출량, 하천특성, 이용현황 등)
-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의 수자원 분야 영향
 - 집중호우·극대가뭄 발생 증가, 평균온도·강수량 증가 등
-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치수·이수 측면의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현황
 - 기후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 수자원을 활용한 녹색에너지 활용방안 등 향후 추진방향

□ 일본측 반응

-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많은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정책수립에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음

-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내용은?
 - 국가 수자원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물 수요전망의 신뢰도 향상 등
- 새롭게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가 개념적으로 반영이 된 계획 수립이 될 것으로 보임

《일본측 발표 : 矢野(야노) 수자원계획과장》

□ 발표요지

- 일본 수자원 행정에 대한 국토교통성 조직과 법률 및 일본의 수자원 현황(강수량, 물 소비량 등)
 - 물 관리 부처가 후생노동성(수도), 농림수산성(농업용수), 경제산업성(공업용수, 수력발전), 환경성(수질), 국토교통성(치수, 하천, 하수도 등)으로 구분
 - 연 강수량 크게 감소, 강설량 감소, 갈수 발생
- 일본 수자원의 현황과 과제
 - 기후변화에 의한 갈수 위험의 증가
 - 수질 개선과 물 환경에 대한 고려
 -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필요
 - 시설의 노화 등으로 인해 증대하고 있는 물 공급 장애 위험

○ 종합 수자원 관리의 개념

- 수자원과 토지자원,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등 자연계의 물 순환을 통합적으로 고려
- 다양한 물 관련부문을 통합적으로 고려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 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실현과 건전한 물 순환계 구축 실현

○ 종합 수자원 관리의 추진

- 수량과 수질의 일체적 관리 추진
- 지표수와 지하수 및 재생수의 일체적 관리 추진
- 긴급시를 대비한 대응과 위기관리의 추진
- 물을 소중히 사용하는 사회의 구축
- 유역 보전 및 유역 관계자 연계

□ 시사점

- 일본은 이미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초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수자원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
 - 이러한 결과가 종합 수자원 관리라는 형태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물 관리 부처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5개 부처(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국토교통성)으로 나누어져 있어 종합 수자원 관리의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수자원관리관계부처연락회의(가칭)’를 만들고, 이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며, 관계부처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일본의 자연조건과 행정조직은 우리나라와도 많은 유사점이 있으며, 일본이 종합 수자원 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이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Ⅲ. 기관방문 및 현장 시찰

① 북해도 개발국 방문

- 위치 : 일본의 북측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가 거의 같은 위도상에 위치
- 면적 : 83,456km²(그 중 북방영토 5,036km²)로 일본 총면적의 22%를 차지하며, 이는 우리나라(남한)면적의 83%에 해당
- 인구 : 562만 7,737명(2005년 기준)
- 행정구분 :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의 하나로 35개시 130개초 15개무라(한계 180개 지방자치단체로 일본에서 가장 많음)
- 북해도 개발국 행정조직
 - 국토교통성 : 홋카이도국
 - 홋카이도 개발국 : 개발감리부, 사업진흥부, 건설부, 항만 공항부, 농업수산부, 영선부
 - 개발건설부 : 삿포로, 이시카리강, 하코다테, 오타루 등 11개 부서
- 북해도 개발계획의 추이
 - 1952년부터 2007년까지 7~9년을 주기로 총 제6기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홋카이도 종합계획('08 ~ '17)

- 3대 전략목표 : 열려 있고 경쟁력 있는 홋카이도 실현,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홋카이도 실현, 다양하고 개성적인 지역으로 구성된 홋카이도 실현
- 5대 추진시책 : 자립적 안정 경제 실현, 자연과 공생하는 지역사회 형성, 북국의 내고장·내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와 모빌리티 향상, 안전하고 안심한 국토 만들기

② 북해도 개발국 아라끼 차장 면담

- 신치토세 공항입지는 북해도 개발정책에 의한 것인지?
 - 신치토세 공항은 일본의 자위대와 같이 사용하는 군용 공항임
- 북해도는 면적이 넓어 SOC 재원부담이 클 것으로 보는데 재원조달은?
 - 농·수산물 수송,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도로 부분의 정부지원이 80%를 차지(홋카이도 특례로 다른 도부현보다 많음)
- 지역의 풍토와 문화를 고려한 강 만들기 사업의 의미는?
 - 지역특성, 역사등 강의 생태계를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조성한다는 의미임

<별첨>

한일 국토분야 협력회의 대표단 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단 장	국토정책국장	강팔문
전체 및 국토분과(6)	토지정책관	이원재
	해안권기획과장	서명교
	국토정책과 서기관	표용철
	해안권기획과 사무관	최영락
	국토정책과 사무관	이용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진범
토지분과(3)	토지정책과 사무관	김정희
	한국토지공사 공공토지비축단장	김희철
	한국토지공사 토지은행처 과장	김용선
수자원분과(4)	하천계획과 사무관	류영훈
	수자원정책과 사무관	신태상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조사팀장	이원관
	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석영

한일 국토분야 협력회의 일본대표단

□ 수석대표

-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심의관 竹歳 誠(TAKETOSHI MAKOTO)

□ 대표단

- 국토계획국장 中島 正弘(NAKAJIMA, MASAHIRO)
- 국토계획국 심의관 福富 光彦(FUKUTOMI, MITSUHIKO)
- 국토계획국 심의관 田村明比古(TAMURA, AKIHIKO)
- 국토계획국 심의관 幾度 明(KIDO, AKIRA)
- 총무과장 鳥飼 哲夫(TORIKAI, TETSUO)
- 종합계획과장 川上 征雄(KAWAKAMI, YUKIO)
- 광역지방계획과장 福島 章(FUKUSHIMA, AKIRA)
- 광역지방정비정책과장 渋谷 和久(SHIBUYA, KAZUHISA)

- 토지·수자원국장 原田 保夫(HARADA, YASUO)
- 토지·수자원국차장 小山 信温(KOYAMA, NOBUATSU)
- 총무과장 内田 俊彦(UCHIDA, TOSHIHIKO)
- 토지정책과장 大野 雄一(OHNA, YUICHI)
- 토지정책기획관 御手洗 潤(MITARAI, JUN)

- 수자원부장 谷本 光司(TANIMOTO, KOJI)
- 수자원계획과장 矢野 久志(YANO, HISASHI)
- 수자원종합조정관 近藤 共子(KONDO, KYOKO)

전체회의 회의전경



기관방문 및 현지시찰



홋카이도 개발국 방문



록본기힐스 방문



오타루 운하 시찰



오도리공원 시찰

양국 대표단 기념촬영

